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의 어려움과 개선방안*

홍세은**

초 록

본 연구는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의 현황과 피해자 식별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원단체 활동가, 변호사, 경찰, 전문가 등 19명을 대상으로 총 35회의 심층면접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국내 성착취 인신매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외국에서 유입되는 성매매 여성이 많으며 이들은 물리적 통제가 없더라도 경제적 취약성이나 정서적 지배를 통해 성착취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성착취 인신매매의 경우 피해자라는 인식의 부재와 피해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피해자로 식별하고 보호·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식별을 위해 표준식별 지표개발 등 피해자 식별 체계 개선과 통역 서비스 등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인신매매, 성착취, 피해자 식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의 일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seeunhong.korea@gmail.com)

I. 서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2020)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인신매매 범죄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주 여성이나 지적장애 여성 등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성착취 인신매매를 포함한 인신매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0년 UN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15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의정서 비준에 앞서 2013년 우리 정부는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조항을 마련하였다. 개정 이전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은 (구)형법 제288조 제2항의 ‘부녀매매죄’였으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법은 (구)성매매처벌법에 마련되어 있었다. 개정을 통해 현재의 형법 제289조 제1항에 인신매매죄가 신설됨에 따라 ‘부녀매매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죄’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형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인신매매죄 처벌 규정은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하는 데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2014년에 3건, 2015년에 6건, 2016년에 8건, 2017년에 3건, 2018년에 2건, 2019년에 3건 적용되는 데 그쳐, 형법상 다른 처벌 규정과 달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이미정 외, 2022: 50-51).

이처럼 2015년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한 이후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처벌 조항이 미비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재하여 우리 정부는 관련 정책을 순조롭게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21년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인신매매 관련 범죄 행위들을 ‘인신매매 등 범죄’로 통합하였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해당 법은 현대적 의미의 인신매매 개념을 채택하여, 사기나 기만, 권력 남용,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착취한 경우나 피해자가 착취에 동의한 경우도 인신매매로 규정하는 등, 국제기준에 근접한 인신매매 정의를 수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항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 인신매매피해자의 식별 및 보호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는 2021년까지 한국을 1등급 국가라고 평가해왔으나 2022년 7월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2등급 국가로 강등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2022: 328-331).

이때 2등급은 ‘미국의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의 최소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인신매매 범죄의 억제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한국이 2등급으로 강등된 이유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성매매 문제와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20년에 비해 인신매매와 관련된 기소 건수가 감소하였다는 점과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을 적절한 조사와 서비스 없이 강제 추방시킨 점이 강등의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정부에서 피해자 식별 지침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은 점과 법원에서 인신매매 범죄자 대부분에게 벌금, 집행유예 또는 1년 미만의 징역형 등 낮은 수준의 제재를 가한 점도 원인으로 지적되었다(U.S. Department of State, 2022: 328).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시행 초기 단계까지 와 있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실정에 맞춘 인신매매피해자의 식별 및 보호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신매매의 여러 유형 중에서 한국이 인신매매 보고서 상 2등급 국가로 강등된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된 성매매 문제에 집중하여, 성착취 인신매매에 관한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때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관련 처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련 국내 연구 또한 풍부하지 않은 실정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활동가, 경찰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국내의 성착취 인신매매 현황과 피해자 식별의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라 2023년 3월 27일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피해자식별지표를 함께 검토하여 개선방안 논의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성착취 인신매매의 개념과 인신매매죄의 적용

성매매에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피해자를 식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성매매는 성적 행위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거래를 지칭하며, 성판매자가 처벌의 대상인

동시에 경우에 따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장응혁·정진성, 2022: 230). 관련하여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약취, 유인의 죄’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되었고 부녀매매죄 대신 인신매매의 죄가 신설되었으며, 성매매처벌법에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신수정, 2016: 209-210).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형법의 인신매매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며 처벌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정의의 미비라고 설명하였다(이병렬·김희자, 2017: 191-193; 박찬걸, 2021: 162-163). 즉 형법 내에 인신매매의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매매’의 개념을 협소하게 판단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박찬걸, 2021: 163). 이에 따라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함께 체계화된 처벌과 대응이 가능한 인신매매 특별법의 제정이 제안되었다(박찬걸, 2021: 196).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인신매매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폐지된 성적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처벌조항¹⁾을 다시 명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정도희, 2019: 136, 140).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인신매매의 범위가 협소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표준화된 식별지표 또한 개발되지 않아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처벌받고 있다(신수정, 2016: 212). 이 때문에 불안한 상황에 내몰린 잠재적 인신매매피해자들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되고 조사나 증거 제출에도 소극적이게 되어 업주와 같은 인신매매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어려워진다(신수정, 2016: 226).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자 추정 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신고 및 고소를 독려하는 방안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의 행위가 성매매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이 제안되었다(박찬걸, 2012: 340). 이 외에도 ‘위계나 위력’뿐 아니라 ‘권유나 유인’에 의해 성을 판매하게 된 사람도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의 제18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이며, 제3호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2013년 4월 5일 개정 시 해당 호가 삭제되었다. 이처럼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함께 다루고자 형법에 통합하였으나, 형법의 처벌 규정에 대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는 폐지된 성매매처벌법 내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다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규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박찬걸, 2012: 328-329; 박찬걸, 2014: 187-188).

2. 외국인 여성 대상의 성착취 인신매매

이주여성 등의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유입되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주여성이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지만 이주여성으로 관련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이들에 대한 성착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병렬·김희자, 2017: 178). 국내에 유입되어 성산업에 투입되는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예술홍행비자나 유학생비자, 단기일반비자 등을 통해 입국하는데, 그중에서도 예술홍행비자(E-6)를 소지한 경우가 많다(두레방, 2007: 19-21). 예술홍행비자는 예술·연예, 호텔·유흥, 운동으로 세부 범주화 되는데(소라미, 2016: 123), 관광 및 유흥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담당하는 예술홍행비자(E-6)나 호텔·유흥비자(E-6-2)를 소지한 외국인 중에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다(두레방, 2007: 23). 그런데 이 비자들은 성착취 인신매매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소라미, 2016: 122; 신윤진, 2017: 137-138; 박찬걸, 2021: 154, 160), 이주여성 대상 성착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의 개인적 취약성뿐만 아니라 비자 제도와 결부된 제도적 차원의 허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예술홍행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은 고용과 입국 과정에서 성착취적 목적을 가진 업체의 사기와 기망, 경제적 예측 등 인신매매적 수단에 의해 성산업에 유입된다(이병렬·김희자, 2017: 185-188). 즉 이 외국인 여성들은 입국 후 하게 될 일이나 고용관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이병렬·김희자, 2017: 187), 임금 조건이나 노동시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모국어 계약서도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결국에는 원치 않는 성매매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박찬걸, 2021: 159). 이 과정에서 언어폭력, 학대나 감시 등 물리적 폭력, 연락 차단, 여권 및 외국 인등록증 압류, 감금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하고(이병렬·김희자, 2017: 188), 입국하기 위해 비자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이 선불금이라는 일종의 부채로 책정되어 경제적으로 예측되는 경우도 있다(박찬걸, 2021: 159).

예술홍행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여성 중 일부는 나이트클럽이나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공연 외 유흥접객행위와 성매매 등을 강요받게

되며(이병렬·김희자, 2017: 185), 이들 외에도 태국 등 비자면제 협정국에서 입국한 여성의 일부 또한 유흥업소에 들어가 원치 않는 성매매를 하게 된다. 이들은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더라도 생계유지나 강제추방을 빌미로 한 협박 때문에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를 지속하게 된다(박찬걸, 2021: 160). 또한 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또는 장시간 근무에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책정된 매상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해 결국 성매매와 출장 데이트 등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이병렬·김희자, 2017: 185-186). 이처럼 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취약성이나 체류 자격의 불안정을 빌미로 인신매매적 특성을 가진 성착취에 내몰리고 있으나, 국내 형법에서 이들이 당한 범죄피해를 인신매매 피해로 인지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여 인신매매피해자로서 받아야 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박찬걸, 2021: 166-167).

이에 따라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소라미, 2016; 신윤진, 2017; 이병렬·김희자, 2017; 정도희, 2019; 박찬걸, 2021). 첫 번째로 피해자 식별 체계 마련이 제안되었다. 관련하여 한 연구는 피해자 식별지표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인신매매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피해자의 귀국과 송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정도희, 2019: 127-132). 유사한 연구에서도 단속 및 수사 현장에서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권 압수나 부당한 근로 기준, 기망 요소가 포함된 계약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행위가 포함된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매매 여성들을 인신매매피해자로 식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박찬걸, 2021: 173-175).

두 번째로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이 제안되었다. 관련하여 한 연구는 형법 내에 인신매매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면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신매매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를 식별하고, 식별 이후에는 피해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것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구금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정도희, 2019: 137-139). 또 다른 연구에서도 사법기관이 이주여성을 ‘거짓 고소인’이나 ‘불법 체류자’로 낙인찍고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통합된 법·제도적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신윤진, 2017: 151-153).

세 번째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제안되었다. 한 연구는 예술흥행비자 제도가 성착취나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 행위들이 합법적 형태로 발생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을 지적하였으며(신윤진, 2017:

144), 유사한 연구 또한 예술홍행비자 발급 시 검증 단계를 강화하거나 해당 비자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정도희, 2019: 132). 실제로 홍행비자와 관련된 인신매매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에도 형법과 출입국관리법, 풍속영업법을 개정하여 홍행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여성을 단속하고 홍행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소라미, 2016: 129-131). 외국인 여성들을 초청하는 업자 대상의 규제도 강화하여 인신매매 범죄나 외국인 불법취업에 관여한 자는 외국인 연예인을 초청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으며, 그 결과 홍행비자 소지 필리핀 여성의 숫자가 급감하는 등 성착취 인신매매 발생이 감소하였다(소라미, 2016: 134). 이는 외국인 여성 대상의 성착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소라미, 2016: 134), 비자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다.

3.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지표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는 2023년 3월 27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를 제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23.3.27.).

피해자식별지표의 내용 중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세부 점검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지표는 ‘모집’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연락망을 통하여, 또는 취업 광고를 보고 모집인을 만나 수수료(중개료, 이탈보증금 등)를 주기로 약속하는 것’과 ‘운송’ 과정에서 ‘살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소지, 다른 나라로 이동했으며, 사전 동의 없이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을 시킨 사람과 목적지까지 동행한 경우’, 그리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입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일정 기간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경우’ 등 ‘은닉’의 요소가 있었던 경우와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시킨 사람에 의해 제3자에게 인계된 경우’와 같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인신매매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23.3.27.: 4).

또한 인신매매등의 ‘수단’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폭행과 협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동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거나 고립된 경우’와 같이 ‘위력’의 요소가 있는 경우와 ‘모집 당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고지) 들은(받은) 것과 실제로 한 일이나 근로조건이 달랐지만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경우’, 즉 ‘위계’의 요소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본인 또는 가족이 모집인에게 진 부채, 급여통장이나 신분증 같은 서류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하지 못하는 등, 통제로 인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떠날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이 경제적·물리적·정서적 통제 등으로 규정되었다(여성가족부, 2023.3.27.: 5-6).

마지막으로 인신매매등의 착취 ‘목적’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이주과정에서 발생한 이동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채무변제를 구실로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게 한 경우’나 ‘자유의사로 일을 그만둘 수 없었거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받은 경우’, 그리고 노동력의 착취 및 장기적출 등의 착취가 포함되었으며,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성적착취를 당한 경우’와 같은 ‘성매매와 성적착취’ 또한 인신매매의 목적 중 하나로 명시되었다(여성가족부, 2023.3.27.: 6-7).

고시된 피해자식별지표는 인신매매등의 ‘행위’, ‘수단’, ‘목적’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점검표를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를 신속·정확하게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인신매매 ‘수단’이 점차 교묘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에 경제적·물리적·정서적 통제 수단까지를 포괄하는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여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4.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를 식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과 잔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기존 연구들은 성매매나 성착취 인신매매 중 일부 과정에 대한 사안만을 다루고 있어 인신매매 범죄의 발생 및 피해자 식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포착하고 어려움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연구 참여자들 대상의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외국인 여성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유입되는 경로와 성매매 환경,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의 피해자 식별과 이에

따르는 어려움 등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식별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피해자식별지표를 검토하여 효과적인 피해자 식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법률적 미비점이나 처벌의 한계 등만을 논의한 선행연구에서는 담지 못했던 성착취 인신매매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성착취 인신매매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활동가, 경찰, 변호사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내었기 때문에,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또한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심층면접 수행과정

성매매 등 성착취 인신매매는 그 특성상 매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발생 실태를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시각을 담기 위해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심층면접 대상자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성착취 인신매매라고 인식하는 범위나 피해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관련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성착취 인신매매의 특성상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인신매매 관련 활동가나 경찰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성착취 인신매매와 관련된 활동가와 변호사, 전문가, 경찰 등 19명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35회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나 언론보도를 검토하여 성착취 인신매매 분야에서 피해자를 지원한 활동가 및 변호사나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연구 대상으로 섭외하였으며, 추가로 성매매 관련 단속이나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을 섭외하여 피해자 발굴이나 식별과 관련된 현장에서의 조치 현황 또한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심층면접에 앞서 전화로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뒤 동의서를 메일로 발송하여 회신받았다. 인터뷰 일시를 조율한 뒤 전화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

고 각 인터뷰는 최소 20분에서 1시간가량 소요되었다. 인터뷰 시작 전 피면담자 신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과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언제든지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심층면접 전 피면담자의 동의를 받고 심층면접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취본을 작성하였다. 녹취본의 내용을 검토하며 연구에 적합한 부분을 선정하였고 이를 주제에 따라 분류한 뒤 정리하였다.

2.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자는 성착취 인신매매와 관련된 활동가와 변호사, 전문가, 경찰 등 총 19명이다. 이때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원한 경험을 갖추었거나 관련 연구 경험이 많은 경우 2회에서 3회까지 확대해 총 35회의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먼저 성매매 관련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 5명을 제외하여 성매매 분야의 현황과 피해자 발굴과 보호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5명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총 9회의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3명을 대상으로 총 6회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한 경험과 지원 시 문제점, 현행 관련법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이어서 학계 등 기관에 소속된 관련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총 11회의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관련 단속 및 수사 경험이 있는 광역시도 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의 경찰 5명을 대상으로 총 9회의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찰의 성매매 단속 방식이나 피해자 발굴 및 식별과정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와 연구 일정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심층면접 대상자 및 질문 사항

사례번호	분야	1차 면접일자	2차 면접일자	3차 면접일자
활동가 1	외국인 성착취	2022. 5. 27.	-	-
활동가 2	외국인 성착취	2022. 6. 24.	2022. 8. 1.	-
활동가 3	성매매	2022. 7. 26.	2022. 7. 27.	-
활동가 4	외국인 성착취	2022. 9. 7.	2022. 9. 8.	-
활동가 5	성매매	2022. 9. 8.	2022. 9. 28.	-
변호사 1	여성인권	2022. 7. 6.	-	-
변호사 2	인신매매	2022. 8. 2.	2022. 8. 11.	2022. 8. 12.

사례번호	분야	1차 면접일자	2차 면접일자	3차 면접일자
변호사 3	성매매	2022. 9. 8.	2022. 9. 9.	-
전문가 1	형법·성매매	2022. 8. 12.	2022. 8. 16.	2022. 8. 17.
전문가 2	성매매	2022. 8. 12.	2022. 8. 13.	-
전문가 3	형법·경찰행정	2022. 8. 12.	2022. 8. 13.	2022. 8. 14.
전문가 4	형법	2022. 9. 8.	-	-
전문가 5	성매매	2022. 7. 25.	-	-
전문가 6	성매매	2022. 7. 26.	-	-
경찰 1	성매매	2022. 8. 8.	-	-
경찰 2	성매매	2022. 8. 9.	2022. 8. 10.	-
경찰 3	성매매	2022. 8. 11.	2022. 8. 12.	-
경찰 4	성매매	2022. 8. 12.	2022. 8. 19.	-
경찰 5	성매매	2022. 8. 17.	2022. 8. 18.	-

3. 심층면접 질문 내용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성착취 인신매매의 현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활동가와 경찰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굴한 경험 및 피해 사례와 피해자가 처한 환경을 질문하고, 특히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가 단속이나 수사 과정에서 겪는 상황 등을 질문하였다. 또한 활동가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서비스 제공 현황과 관련 권익보호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관련 법의 한계와 피해자의 보호 및 식별의 어려움 등을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성매매 환경에 노출되며 피해 이후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단속이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인지되어 보호나 지원을 제공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질문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심층면접 내용

주제	내용
피해자 발굴 경로	- 피해자를 알게 된 경로 -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 사례
피해 환경	- 성착취 피해자 입국 경로 및 업소 환경
성매매 피해자 수사과정	- 성매매 수사 경험 내용 - 피해자 발굴 경험 - 성매매 피해 여부 확인 및 절차 - 피해자 식별의 어려움 - 성매매알선자 수사의 어려움 - 성매매 수사 개선 방안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 및 식별	- 피해자 발굴 및 기관 간 협조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체류 지위 문제 -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지원 서비스	-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 수사/재판 과정의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 피해자 체류 지위를 위한 제도적 지원 서비스
인신매매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역할	- 권익보호기관의 현장 조사 및 피해자 판정 - 권익보호기관과 경찰과의 협조 및 정보공유 -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권익보호기관의 역할

IV. 연구 결과

1. 성착취 인신매매의 현황

먼저 심층면접을 통해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의 현황, 즉 ‘피해자의 유입경로’와 ‘성착취 피해자가 처한 환경’을 살펴보았다. 이때 활동가와 경찰 모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여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착취 인신매매와 그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성매매 현장에서 ‘피해자 식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1) 성매매 여성의 유입경로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유입경로와 관련하여 활동가와 경찰 간 인식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직접 접하는 여성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 정도가 심한 여성은 활동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어 활동가들

은 피해가 심각한 사례를 접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의 경우에는 단속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착취 인신매매는 불법적 속성이 많아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를 통해 부분적으로 파악한 실상을 종합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활동가들은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업으로 내몰린 인신매매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적 영역에서 이들을 피해자로 식별하고 보호·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활동가들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하게 될 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외국인 여성들은 성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빚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업주가 시키는 대로 성매매를 하게 된다. 이처럼 기망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고 늘어난 부채 때문에 성매매를 지속하게 되는 구조는 인신매매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태국에서 (한국에서 하는) 건전한 마사지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마사지를 배우고 입국하였다. 그러나 도착해서 일하게 될 마사지업소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 앞으로)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출국 전 알려주었던) '건전 마사지' 업소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건전한 마사지업소로 옮겨졌는데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일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며칠 동안 그 업소에 있었는데 단순 마사지 일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빚이 생겨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너무나 무서워서 업주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다. (활동가 1)

(태국 여성은) 안마라고 하면 그 자국에서 경험했던 그걸(마사지)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왔더니 유사성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사지) 동의는 했죠. 네 마사지 맞아요. 자기 나라에서 알고 있는 마사지가 아니었던 거죠. (활동가 5)

활동가들은 특히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 중 'E-6'이라는 예술홍행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한다. 즉 예술홍행비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은 성매매를 해야 한다는 정보를 모른 채 들어오는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작업비와 입국을 위한 항공비 등이 비용으로 산정되어 부채가 되기 때문에 성매매로 내몰리게 된다. 또한 이 외에도 사증면제를 받아 비자 없이 입국하거나(무사증 입국자) 단기체류비자만을 소지한 채 입국한 뒤,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체류하며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

E-6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태국 여성들이라든가 사증 면제로 입국하는 분들은 남미, 중미 국가 또는 태국, 러시아 이런 분들은 전국에서 유입되어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활동가 2)

마사지 업계 또는 오피스텔 성매매. **(이분들 무슨 비자로 입국하나요?)** B-1인데요, 이게 사증 면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단기체류겠네요.)** 네. 90일이에요. **(90일 동안 체류?)** 저는 사실 이 기간을 딱 지켜서 나간 여성을 못 본 것 같아요. 보통은 90일 동안 체류를 하고 미등록으로 체류하는 여성들을 많이 봤어요. (활동가 2)

한편 경찰은 활동가들과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 대부분이 성매매 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입국하거나, 최근에는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동일 국가 출신의 사람들의 SNS를 통해 정보를 얻어 입국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외에도 일부 외국인 여성은 농촌 등에 취업해 일하다가 돈을 더 많이 벌 목적으로 성매매업에 유입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외국인은 굉장히 많고요. 태국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여기로 옵니다. 와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취약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일부러 속칭 보찌(수수료)를 주고 와서 돈을 벌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태국 애들은 정말 많고요. 제가 들어본 걸로 처음에는 딸기밭에서 일했다, 논산, 원래 자기 딸기밭에서 일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힘들고 그래서 여기로 왔다고, 이거 하면 태국 친구가 돈 되게 잘 번다고 해서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여성들도 있고. (경찰 2)

브로커를 통해서 하면은 돈(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먼저 들어와서 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나름대로 SNS 통해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자발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럼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죠. (경찰 3)

2) 성착취 피해자가 처한 환경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도 활동가와 경찰 간의 인식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활동가들은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근무하는 업소의 환경에서 인신매매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업주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는 채울 수 없는 수준의 '주스' 판매 할당량을 부과하여 간접

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다.

필리핀 출신 사례를 보면,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클럽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공연을 기대했는데 단 한 번도 공연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주스 포인트'라는 시스템이 있어 여성들이 클럽에 오는 구매자들에 주스를 사달라고 구걸하는 시스템 있는데, 2주에 200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만원 정도가 1포인트로 200포인트는 2백만 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통 '주스'가 20달러이므로 2포인트를 받는 것이다. 20달러 술 구걸로만은 200포인트를 2주 안에 만들 수 없다. 즉 성적 서비스가 있는 '주스'로 매상을 올리라는 것이다. 성적 서비스가 있는 '주스'는 80-100달러이다. (활동가 1)

또한 활동가들은 성매매 업주들이 여성들의 이동을 통제하거나 감시한다고 설명한다. 즉 일부 성매매 업주는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의 이동을 감시하며, 이들의 신분증을 압수하여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압수 외에도 신분증을 온라인에 공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외국인 여성의 경우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업주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도록 하여 증거 수집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외출을 통제하나요?) 몸은 자유롭지만 도망가면 그 여성의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SNS에다가 올려버린 업주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여성들이 도망가면 그 여성 개인정보라든가 그 빛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SNS에 올라가기 때문에 몸이 자유로워도 통제는 굉장히 심한. (활동가 2)

여성들이 뭐 편의점에 가려고 해도 웨이터랑 같이 가야 해요. 그런데 웨이터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 이 동네 지역 모르잖아, 가다가 길 잃어 버리면 어떡해, 나랑 같이 가'라고 하지만 그거는 감시인 거죠...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여성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핸드폰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주가 핸드폰을 만들어 주고 업주 명의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거기에다가 증거를 남겨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정보를 지우게 만들어요. (활동가 5)

한편 경찰은 성매매 현장이 납치 및 감금을 통해 성착취가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성매매 여성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업주보다는 성매매 여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업주가 여권을 뺏거나 감금하고 감시하는 등의 행위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이나 수사

중에 이러한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로 인지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업주 상대로도 물어보면... 오히려 조금 여성들이 갇히 된 위치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만약에 대금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업주들은 3만 원 가져가고 여성들이 7만 원 가져가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돼 있고, 잘못해줘 버리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또 브로커가 한 명 있거든요. 이런 데만 이렇게 하는 전문 브로커가 또 있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여권을 뺏겨가지고 감금당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경찰 4)

(외국인 여성이 휴대폰) 112 신고 한 통이면 업주들이 다 줄줄이 잡혀갈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개네들이 말할까봐, 업주들이 오히려 또 전전긍긍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여권을요 본인들이 지네 방에, 저희가 검거 현장에서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잖아요. 보면 여권 지네가 다 들고 있습니다 거의... 돈은 자기네가 거의 다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냥 바로바로 다 입금하고, '약간의 돈 더 받을 거 있어요, 사장님한테 돈 받을 거 있어요' 오히려 이런 거는 봤는데 사장님한테 돈을 갚아야 될 게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경찰 2)

3)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의 어려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업주의 사전 교육이나 지시, 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이 여성들은 성매매 행위자로 인지되어 버리기 때문에 피해자를 식별하고 보호 및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가 가장 가장 답답한 것도 예를 들면 이제 어디에서 외국인 여성 특히 이제 안마 시술소 이런 데 있잖아요... 가서 거기서 '당신 도와드릴 테니까 여기 사실대로 말해도 된다,' 이래도 이 사람들 아니라고 그런 일 없었다고 현장에서 (말하고).. 예를 들면 자기는 '피해받은 게 없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알고 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계속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공무원이나 경찰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죠... 도움을 드린다고 해도 자기는 '몰라, 몰라, 몰라'만 하시고요 심지어... 그리고서는 우리는 도움 받을 거 없다.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쪽에서 보호조치를 하기가 경찰이나 담당 우리 여가부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피해받은 거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사람은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출입국 관리 위반 업무가 돼 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성매매 행위자가 되어

버리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행위자에 대해서 (신분이) 범죄자가 돼 버리잖아요.
(활동가 3)

또한 피해자 상담 경험이 있는 활동가 또는 변호사는 경찰이 성매매 피해의 범위를 ‘물리적인 감금 여부’나 ‘자발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소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접적인 통제’나 ‘심리적인 지배’ 등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성착취 피해자를 식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성매매에 대한 돈을 여성이랑 업주랑 반반 받았는지 업주가 다 가져갔는지 아니면 여성이 다 혼자서 가질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 이게 과연 감금이었는지도,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여성들이 도망갈 수가 없었는데 ‘그럼 SNS에다 신분을 다 노출한다’ 이런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들은 도망갈 수가 없었는데 경찰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자발성, 비자발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거를 파악을 하려면 알고 왔고 어느 정도 알고 왔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활동가 2)

외출도 자유롭게 못하고 그런 신분증 같은 것도 업주가 보관하고 아무리 그럼 내가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이게 과연 자발적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데 일단 ‘내가 하고 내 발로 찾아갔어요, 끌려간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자발성이 척도가 되어가지고 ‘너는 니가 원해서 한거니까’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경찰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찰들도 ‘요즘 세상에 인신매매가 어디 있냐?’고 바로 딱 그 말부터. ‘얘네 다 돈 벌려고 해요.’ 딱 그 말. 아니 그럼 그래서 돈을 벌면 이게 인신매매가 아닌 건가? (변호사 3)

2. 피해자 식별의 어려움 및 개선방안

이어서 심층면접을 통해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 피해자 식별체계에 대한 개선의견

심층면접이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가 이루어지기 전 수행되었기 때문에, 인신매매피해자 식별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지적

되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인신매매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고 수법이 교묘해져서 식별지표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현재 신고의무자에게 식별지표 이용을 강제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자가 자의적으로 인신매매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신고하는 데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신매매) 식별지표라고 하는 게 딱 누군가를 봐서 이 사람이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하는 걸 판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인신매매를 당했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정도만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디테일할수록 실제로 포섭할 수 있는 케이스는 줄어든다고 우리가 식별지표를 만드는 이유는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사례를 최대한 끌어내서 우리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이제 이걸 소화하기 위한 건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만들수록 활용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전문가 3)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식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따라서 이처럼 인신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신매매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저도 한번 인신매매방지법 그것을 봤는데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그런 식으로 있던데 어쨌든 성적 착취는 성매매를 지금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피해자냐 아니냐 여부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부분 자발적으로 하고...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느 정도 선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인지 이런 기준은 없고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또 담당 형사의 기준으로도 한다 그러면 이게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경찰 4)

인신매매방지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그리고 현장에서 제기된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3년 3월 식별지표가 고시되었다. 그러나 식별지표의 고시만으로는 실효성 제고를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에는 ‘성매매 관련 업무 매뉴얼’과 ‘성매매 피해자 식별지표’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속 현장에서 이를 100%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식별지표를 마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6년에 (성매매피해자) 식별지표가 한번 만들어서 내려왔었잖아요... 성매매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 조사할 때는 신뢰관계인 꼭 동석케 하고 성매매 피해 상담소에 연락하게끔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꼭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꼭 성매매 여성으로 의심될 때는 우선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지 협박을 당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감금을 당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강요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권이나 그런 것들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이게 또 큰 포커스거든요. 그다음에 또 위계에 의한 방법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집 당시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는지 그럼 실제 그 일과 같은 건지 아니면 모집 당시에 약속받았던 근로 조건 같은 경우와 다른지 아니면 왜 다른지 이런 것들은 그런 관계에서 어떤 피해를 당한 게 있는지... 그런데 막상 보면 일상에서는 단속하고 이거를 보통 단속이 심야에 이루어지잖아요. 심야에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우리도 피곤한 상태고 그러니까 또 이런 것들이 100% 잘 된다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경찰 5)

아무래도 우리가 피해자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현장에서부터 다각도로 질문을 던져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하면 좋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결국 우리 경찰관 단속하는 사람들 역량이 문제잖아요. 이게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조금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경찰이 그걸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경찰 5)

2) 피해자 식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사회인식 개선

피해자 식별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성매매 피해자가 경찰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알선자에 대한 제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알선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이나 증거 제출이 필요하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 협조하지 않는다. 심지어 보호나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호소로 가야 하는 등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제 그 대신 성매매 알선자를 검거를 해야 되는데 성매매 여성들도 잘 협조를 안 해요. ‘본인들이 처벌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숨겨요. **(성매매 여성이 처벌되지 않으면 진술 많이 할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 성매매는 실제 이제 성관계를 한 여성의 진술이나 또 증거라든지 아니면 알선자하고 주고받은 카카오톡 아니면 텔레그램 이런 증빙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계속 부인하면 아무런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소를 할 수가 없죠. **(노르딕 모델)** 그거는 충분히 이제 물론 법률적으로 검토라든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론 합의 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본인이 처벌을 안 받는다는 조건이 형성되면, 나 사실

이렇게 이렇게 했고 누구한테 어떻게 했고 이런 거를 자세히 진술할 수가 있죠. 본인
이 처벌받는데 내가 나 처벌받기 위해서 내가 다 까발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경찰 3)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이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
전이 보장될 수 있는지, 체류 자격 보장 등이 이루어지는지 대한 회의감이 있
기 때문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단속된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바로 지원기관과 접촉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함
을 지적하였다. 즉 현재는 경찰 단계에서 바로 강제퇴거 조치가 이루어져 지원
기관의 개입 기회가 적기 때문에 경찰 단속이나 조사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도
록 하는 절차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으나 수사기관 자체도 그렇게 신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내가 이 말을 다 얘기해도 수사기관한테 다 털어놨잖아 내
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정당한 내가 보상이라든가 이후에 내 안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느냐에 대한 회의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제대로 말을
안 하는 거라고 봐야. (전문가 1)

사실 저희가 강제퇴거 당한 여성들을 만나지를 못했던 거죠. 대부분의 거의, 왜냐하
면 상담소나 쉼터에 연계를 안 하고 (강제)퇴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저
희가 합동 단속 같은 데 갔을 때 저희가 그러면 업소에 들어갔는데 여성들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피의자 신분으로 받을 것인지 사실 저희가 개입
했을 때는 그거를 상의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는 해요. 여성에게 그거를 결정하시라,
어떻게 조사를 받을 것인가. 근데 그렇다면 저희가 상담을 되게 급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사 전에 상담을 진행했을 때 그러면 한국 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피해자인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로 조사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단속
을 했고 여성들을 경찰서로 데려왔고, 근데 그러면 빨리빨리 조사를 진행을 해야 하
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상담원이나 활동가가 없으면 그냥 바로 진행을
하고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제퇴거를 하겠죠. 근데 상담원이 개입했을 때 그게 1시간,
2시간 안으로 빨리 결정하시라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 절차에서
는 일단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
각이 들어요. (활동가 2)

또한 외국인 피해자는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질 높은 통역으로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영어권이 아닌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인 전문지식을 갖춘 통역사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한 명의 통역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통역사가 일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증언 내용이 일관되지 않게 전달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떤 걸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언어 문제예요. 언어 문제. 긴급 전화도 그렇고요. 지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언어다. 언어가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가능해야 되는데 실은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 풀이 있다면 좋겠죠. 같은 풀이건 아니건. 아마 지역에는 굉장히 한정적인 자원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제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짐작하는 게 사람이 한 50명씩 있으면 풀로 구성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 그래서 외국어 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 6)

따라서 활동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제공되는 통역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특히 경찰의 인력풀에 속한 통역인의 경우 성매매에 관련된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통역사 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증언 내용을 녹화하거나 녹취록을 만들어 다른 통역사로 하여금 검증하게 하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성착취 피해 사례 관련 전문 통역인 부재하다. 수사기록은 통역인이 말하는 단어로 기록되는데, 통역인이 성착취 피해 관련 단어를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활동가 1)

통역은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인신매매방지법) 44조에 통역이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통역이나 번역을 지원한다는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난민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통역을 하다 보면 이게 난민법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시행령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통역 인력, 전담할 수 있는 통역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야 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 (전문가 4)

저는 사실 녹취록 만들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 녹화 좀 필수로 '이거 영상 녹화하시겠어요?'하는 게 아니고 좀 필수로... 이게 (통역이) 맞게 된 건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사후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서류 같은 게, 번역이 안 되거든요 사실. 민사나 가사 같은 건 당연히 안 되고 우리 형사에서는 7개인가 14개인가 하여튼 그게 번역이 돼 있는 게 있긴 해요. 기본적으로 공소장은 당연히 번역해서 보내주고 이게 '내가 뭐 때문에 조사받는 건가' 알아야 하니까. 근데 그거 말고 모든 서류가 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진짜 말 그대로 이 사람 피해자든 피의자든 권리가 보장이 되려면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서류를 직접 내가 보고 번역된 걸로 받아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것들이 여전히 너무 많고. (변호사 3)

한편 피해자의 현실을 정확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안한 지원단체 연계나 통역 서비스 외에도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또한 요구된다. 인신매매는 그 중대성에 비해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는 범죄이며 심지어 현재에는 발생하지 않는 사라진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성착취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적극적인 피해자 식별 및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착취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인신매매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국내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낮은 수준의 인식으로 인하여 외국인 여성 대상 성착취 사건의 수사와 처벌이 어렵다. 수사 활성화를 위해 이들 피해자를 보호하고 체류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피해당한 여성의 권리회복 문제도 있지만, 향후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피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요하다. 외국인 여성 성착취 피해 사건이 사건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향후 관련 수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사건이 잘 드러나지 않아, 일반 대중은 한국 내에 이러한 피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활동가 1)

특히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여 어떤 것이 인신매매에 해당하는지 알리고,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려주어 향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자성을 이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외국인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사실 조사를 해도 ‘내가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봤자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가지는 인신매매에 대한 통념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그 통념을 이분들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인신매매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3)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들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모집 유인 과정에 와서 한국에 와서 어떤 업소에 가서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인신매매의 전체 코스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이동까지 가고 업소를 옮겨 다니거나 이러는 것들이 전부 다 그 과정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전부 인신매매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당신은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피해자로서 보호를 해 줄 것이고 여기서 어떤 도움을 필요하고 당신은 뭐냐 위험한 상태로 강제출국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당신이 원하는 상태에서 머무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줘야 하거든요. (활동가 3)

또한 현재 피해자식별지표가 마련된 상황에서 해당 지표가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은 물론 잠재적 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고 지표에 포함된 행위, 수단, 목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신매매는, 그러니까 사회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인신매매가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 (새로운 법에 따른 인신매매는) 이런 것입니다 (소개해야죠)... 일단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단계별로 나눠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나 해야될 것 같고, 예방이라면 결국에는 관련 분야 종사자, 관련 분야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훈련 이거거든요. (전문가 1)

이제 사실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한 다음에나 가능할 거고 당장은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정도고 당장은 사실 피해자 측에서 이걸 인신매매라고 인식을 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 출발한다는 의미 정도인 거고 뭐랄까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 형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 한 10여 년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아마 인신매매도 그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 3)

V. 결론

본 연구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신매매방지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최근 문제로 떠오른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원단체 활동가, 경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현재 한국의 성착취 인신매매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성착취 인신매매 현황에서는 ‘성매매 여성의 유입경로’와 ‘성착취 피해자가 처한 환경’, 그리고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의 식별’에 관련된 현황과 어려움을 살펴보았으며, 동시에 경찰과 지원단체 활동가 사이의 시각차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유입경로를 살펴보면, 경찰과 활동가의 시각이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원단체의 활동가들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서 실제로 할 일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국 후에는 부채 때문에 성매매업으로 내몰리게 되는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찰과 활동가는 성착취 피해자가 처한 환경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성매매가 더 이상 납치나 감금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강압적 성착취와는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원단체의 활동가들은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근무 조건에 인신매매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업주들이 과도한 ‘판매 할당량’ 등을 부과하여 성적 서비스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입국 시 발생한 비용을 부채로 책정하여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성적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성착취 피해자를 발굴하고 식별해내는 과정에서도 경찰과 활동가의 시각차가 확인되었다. 경찰의 경우에는 성매매업 자체에 인신매매적 요소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들이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물리적 감금이 없고 자발적인 경우에는 피해자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 상담 경험이 풍부한 활동가나 변호사의 경우에는 경찰이 성착취 피해의 범위를 다소 소극적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간접적인 통제나 심리적 지배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식별할 필요가 있

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효과적인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을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식별지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인 2023년 3월 피해자식별지표가 고시되었으며 해당 지표 내에는 인신매매등의 ‘행위’, ‘수단’, ‘목적’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점검표와 다양한 피해의 예시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실제로 해당 지표에는 기존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상담 및 지원 사례나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된 피해 유형들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물리적 통제수단 외에도 ‘이주과정에서 발생한 이동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채무부담으로 일을 그만두는 것이 불가능했다’와 같은 경제적 통제나, ‘업소를 탈출하면 가족 및 지인 등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찍게 했다’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정서적인 통제 또한 인신매매등의 ‘수단’ 요소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명시하여 보다 포괄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러한 지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의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성매매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는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착취 인신매매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관련 정보를 잠재적 피해자나 이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도출되었는데, 단속 및 수사 단계에서 지원기관 활동가를 연계하여 필요한 도움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외국인 피해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 조사나 재판과정에서 제공되는 통역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2023년부터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지만 처벌에 대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신매매피해자는 있지만 인신매매 범죄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실제로 UN인신매매방지지의정서 비준에 따른 국내 이행 입법을 갖추기 위해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인신매매죄가 신설되었으나 형법에 포함된 인신매매죄의 처벌 규정은 UN 의정서의 인신매

매 기준과는 동떨어져 실제로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형법의 인신매매죄가 적용된 건수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동안 30건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장응혁·정진성, 2022: 231).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인신매매방지법 내 처벌규정의 별도 도입을 논의하는 등 인신매매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차인순, 2021: 65; 장응혁·정진성, 2022: 232에서 재인용). 인신매매 처벌 조항의 불완전함은 피해 신고나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하기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따라서 인신매매방지법을 시작으로 향후 형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착취 인신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지원단체 활동가와 변호사, 경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정확한 발생 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성매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심층면접이라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주관성이 포함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수행되는 연구에서는 별도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이 유사한 경험을 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정량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관련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 결과가 축적된다면 음성적으로 발생하여 그 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두레방(2007). 2007년도 경기도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경기도 연구
용역 사업보고서.
- 박찬결(2012).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 규정에 대한 검토”. *피해자학 연구*.
제20권 제1호. 317-357.
- _____(2014). “최근의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1호. 175-204.
- _____(2021). “호텔·유흥비자(E-6-2) 소지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의 합리
적인 대응방안”. *형사정책*. 제33권 제2호. 151-181.
- 소라미(2016). “일본의 인신매매 정책에 비추어 본 한국의 예술홍행비자 소지 이
주여성의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인권법평론*. 16호.
21-141.
- 신수정(2016). “인신매매 방지법의 필요성과 국제노동기준”. *법학논집*. 제20권 제
3호. 207-230.
- 신윤진(2017). “예술홍행비자제도를 통한 이주여성 고용의 인권 문제와 법적 과제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기준과 외국사례에 비추어”. *법학논총*. 제41권 제1
호. 115-158.
- 여성가족부(2023. 3. 27).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여
성가족부고시 제2023-13호.
- 이미정·정연주·홍세은·정수연·장응혁(2022).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병렬·김희자(2017). “예술홍행비자(E-6) 소지 이주여성에 대한 인신매매행위
대응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북아문화연구*. 50호. 177-204.
- 장응혁·정진성(2022).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에 대한 시론 - 국가인권위원회
와 미국의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을 소재로 -”. *여성연구*.
제113권 제2호. 229-252.
- 정도희(2019). “이주민 성적 착취 인신매매 대응과 피해자 보호”. *피해자학 연구*.
제27권 제3호. 119-144.
- 차인순(2021).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인신매매방지법’ 제
정”, *국회보* 제653호.
- UNODC(2020).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2020*. United Nations.
- U.S. Department of State(2022).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Abstract

Difficulties in Identifying Foreign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Seeun, Hong*

This study is conducted to confirm the current status of sexual exploitation suffered by foreigners and the difficulty in identifying the foreign victims, and to find ways to make improvement. To this end, a total of 35 in-depth interviews are conducted with 19 people, including support group activists, lawyers, police, and experts, and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se interviews are classifi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sexual exploitation in Korea,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many women sex workers coming from abroad and they are experiencing sexual exploitation, where they go through economic difficulties and emotional abuse even without physical control. However, in the case of the sexual exploitation involving human trafficking, it was found that it was difficult to identify, protect, and support victims due to the fact that the victims are not recognized as a "victim" and the uncooperative attitude of the victims. Considering this situation, it is discussed that to effectively identify foreign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victim identification system, such as developing victim identification indicators, and clear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along with improvement of social awareness.

Keywords : Human Trafficking, Sexual Exploitation, Identification of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